의원 모두가 의장·상임위장 '감투 나눠먹기'

광주·전남 소규모 기초의회 '빈축'

상임위 중복 배정… 견제·감시 뒷전

광주·전남지역 소규모 지방의회가 의원수와 비슷한 수의 의장·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는 등 '감투 늘리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자치단체가 위원장 업무추진비·전문위원 배치·사무실 마련 등에 따른 수천만원(연간)의 예산까지 별도 투입하게 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광주·전남 지방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의원 수 13명 이하 소규모 의회의 상임위 설치 규정이 없어지면서 상임위 구성이 초미니 의회까지 확산, 광주 5개 기초의회와 전남 22개 기초의회 가운데 광주 5개, 전남 16개 등 모두 21개 의회가 상임위를 운영중이다.

의원 수 7명에 불과한 함평군의회의 경우 지난 7월 3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의장,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 3명의 간사까지 포함하면 평의원은 1명도 없는 셈이다.

군은 이들 위원장을 위해 예산 2천600만원을 들여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문위원을 배치했으며, 매달 64만원씩 연간 2천300여만원(3명분)의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 원구성으로 연간 최소 4천900만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것이다.

의원수가 9명인 영암군의회도 지난달 5일 상임위 설치에 이어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성군의회(의원수 8명)는 지난 2006년 9월, 무안군의회(의원 수 7명)는 지난 2006년 10월, 담양군의회(의원 수 9명)의 경우 지난해 4월, 영광군의회(의원 수가 9명)는 지난 3월, 완도군의회(의원 수 9명)는 지난 5월 상임위를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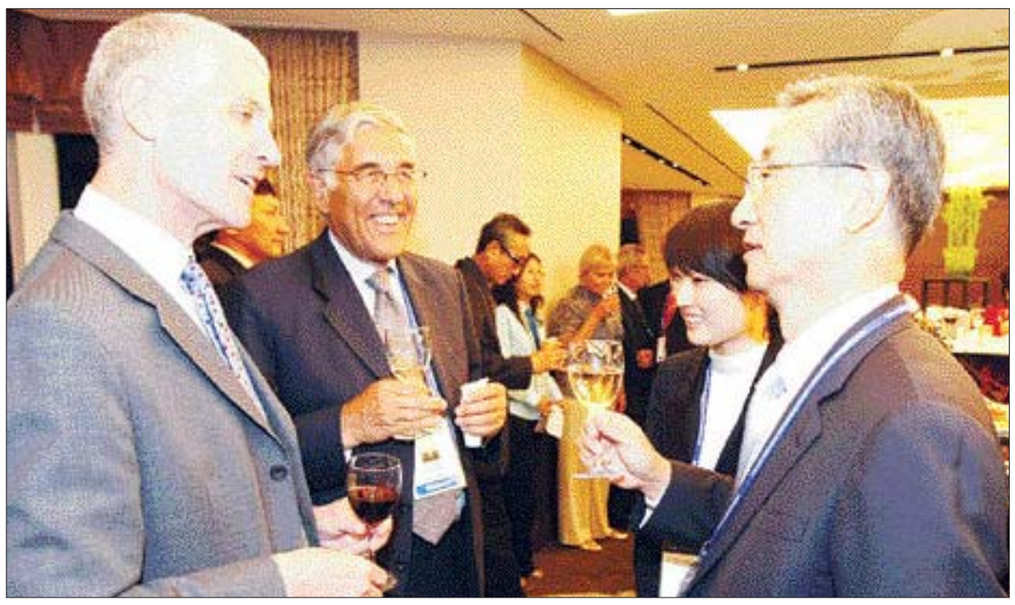
광주시 북구의회(의원수 20명)도 지난 1월 기존 3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로 늘리고 민원상담실 등으로 쓰던 공간을 늘어난 위원장 사무실로 바꿨다.

하지만 이들 의회 대부분이 각 상임위에 의원이 중복 배정되면서 상임위 구성 취지인 전문성 및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문성 강화와 효율성 확대 등을 위해 상임위 관련 기준을 삭제했는데, 의원들이 의정활동 강화보다는 개인사무실 확보, 업무추진비 타내기 등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경실련 김기홍 정책부장은 "당초 취지대로 상임위를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비를 더 타내려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세계 헌법재판소장 회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1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 헌법재판소장 회의' 환영 리셉션에서 니컬러스 필립스 영국 수석재판관(왼쪽에서 두번째) 등 각국 헌법재판 고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르 피해 무안·신안 어민들에 지자체가 자금지원 보증 서줘야

정부 "신용도 낮다" 대상 제외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당한 무안·신안지역 양식어민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일 무소속 이윤석 의원(무안·신안)에 따르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당한 무안·신안지역 양식어민 30여명은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받아 김 양식장 설치 등에 나서야 하나 신용 상태가 낮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양식어민들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해당 자치단체가 보증을 선다면 정책자금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막상 무안군과 신안군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을 한 경우가 없는데다 보증을 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자금 지원 문제가 풀리지 않자 최소한 이달 말까지 김 양식장 등을 설치해야 할 양식어민들은 자금난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안군의회와 무안군의회가 조속히 군의 정책자금 보증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윤석 의원실 관계자는 "양식어민들이 뜻하지 않은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당했으면 해당 지자체나 지방의회에서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무안군과 신안군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군 자체적인 정책자금 보증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현안 적극 대처"

강기갑 대표, 광주기아차 방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2일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서민에게는 5%의 지원을, 국민의 1%인 재벌에게는 95%의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날 기아자동차 노조의 민생상담실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광주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벌 편향적인 세제개편안은 민노당이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지방자치 및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지역 친화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대표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나라당 왜 이러나

광주시당서는 폭력 사태·전남도당서는 취업사기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에 대한 지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다.

신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 집안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당직자간 주먹다짐에 이어 취업사기 파문까지 발생하는 등 잡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일 "지난달 27일 발생한 광주시당 당직자 간 폭력 사태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직국측은 "폭력 사건과 관련, 관련자들을 만나 정확한 사실을 파악한 뒤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앙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떠나 폭행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광주시당의 폭력사태에 이어 전남도당에서는 당원 A씨가 수억원대 취업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쫓기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당은 2일 당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긴급 윤리위원회를 열고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당원을 제명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A씨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신청했는가 하면 전 지구당 위원장 등을 지낸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당은 또 지난 7월 17일 박재순 전 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이후 40여일이 지났음에도 신임 위원장조차 선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운영위원들간 이견으로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가뜩이나 지역 홀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집안싸움이나 추태 대신 지역 현안을 챙겨 '호남 구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국내 최대 장애인 축제 내년 9월 전남서 열려

'2009년 뷰티풀 챌린지'

전국 장애인 가족 2만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장애인 축제인 '2009년 뷰티풀 챌린지'가 내년 9월 전남지역에서 개최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뷰티풀 챌린지' 행사를 도 단위 광역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 대회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대구·부산·대전 등 대도시에서만 열렸지만 이번에 전남도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중·소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

개최도시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도내에서 비교적 장애인 시설이 갖춰진 목포시와 광양시 중 한 곳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뷰티풀 챌린지'는 4일 동안 선수단과 가족 및 일반 참관인 등 약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와 대한민국 보조공학 박람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장애인 관련 행사가 열리며, 행사비로만 약 2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도는 대회 개최에 힘입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서비스 직접소득 100억원, 관광비용, 홍보효과 등 간접소득 400억원 등 약 500억원의 직·간접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임산부 주차면 확보를"

광주시의회 이정남의원 발의

광주시의회 이정남(민주·광산구3) 의원은 2일 "'임산부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적으로 임신, 육아,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면 확보 등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건의안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도 장애인과 동일하게 편의증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